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 점검

프로그램

2:00 ~ 2:05 **환영사:** 김영식 교수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2:05 ~ 2:20 **축 사:** 홍장표 교수 (부경대학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실 교수 (서강대학교: 한국경제학회 회장)

기조발제

2:20 ~ 3:30 사 회: 백복현 교수 (서울대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발표 1: 임원혁 교수 (KDI 정책대학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평가: 구조개혁과 거시정책의 부조화”

발표 2: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패널토론

3:50 ~ 5:00 사회: 김인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토론: 김소영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종화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상영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오후 2:00 ~ 5:00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101동 210호)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SNU Institute for Research in Finance and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평가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 기조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소망이 담긴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1) 일자리중심·소득주도성장, (2) 혁신성장, (3)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



기본 인식: 2017년 대선 전

- 1945년 이래 한국은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고속동반성장을 통해 최빈국에서 고소득 산업민주국가로 도약
 - 부의 재분배(농지개혁, 전쟁), 인적자원개발,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이 맞물려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기대와 성과에 기초한 보상과 규율이 확산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달성
- 한국경제의 비교우위가 자본/지식집약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국제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고용과 분배의 양극화 확산
 -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1) 낙수효과의 약화, (2) 불균형 확대, (3) 국제무역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한계에 직면
- 성숙기에 접어든 한국경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혁신과 포용을 화두로 논의 전개

<표> 한국의 1인당 소득 장기 추이(1950~2010)

연도	한국의 1인당 소득 (실질 1990년 PPP 기준)	한국-미국 비율(%)	한국-세계 비율(%)
1950	854	8.9	40.6
1960	1,226	10.8	44.4
1970	3,725	14.4	58.2
1980	4,114	22.1	91.2
1990	8,704	37.5	169.0
2000	14,998	52.3	247.6
2010	21,935	71.2	2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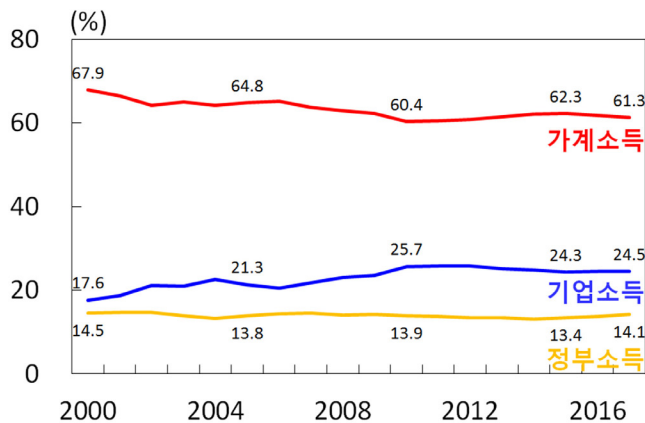
자료: Maddison Project Database (S. Korea, USA, Total World 항목 참조)
<http://www.ggd.net/maddison/maddison-project/home.htm>

낙수효과의 약화와 불균형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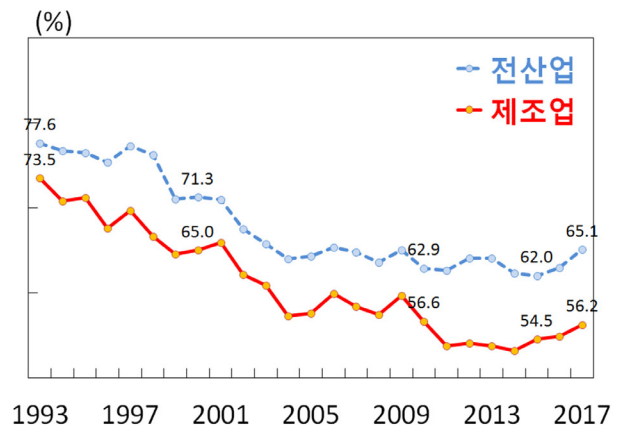
고용유발 효과(10억원당 명)

	2000	2005	2010	2014
투자	22.5	16.7	13.7	13.2
수출	15.7	10.8	8.3	8.1

국민소득의 부문별 비중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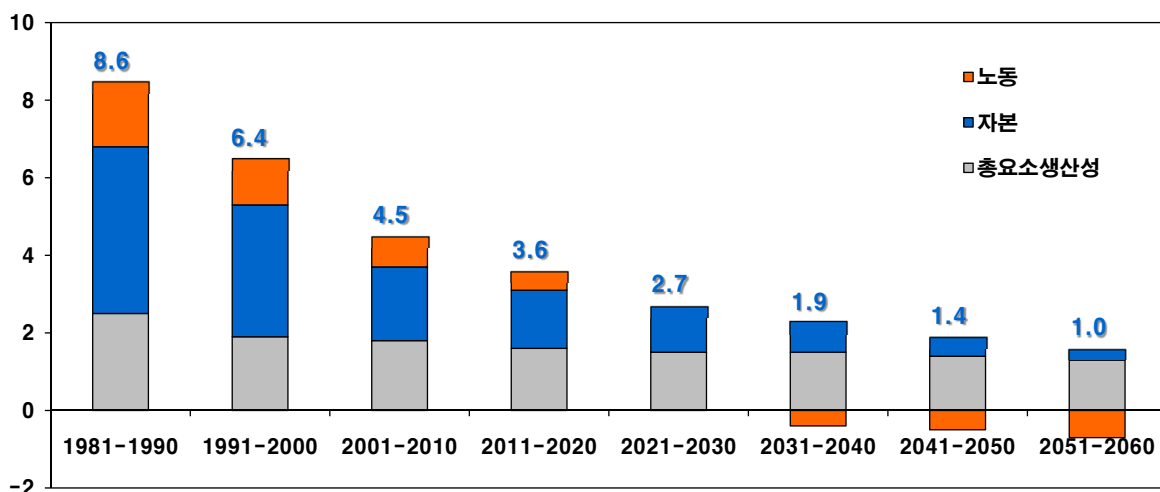


한국 경제의 미래?

▶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향후 잠재성장률의 대부분을 차지**

- 후발자의 이점이 줄어들면서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선진국의 경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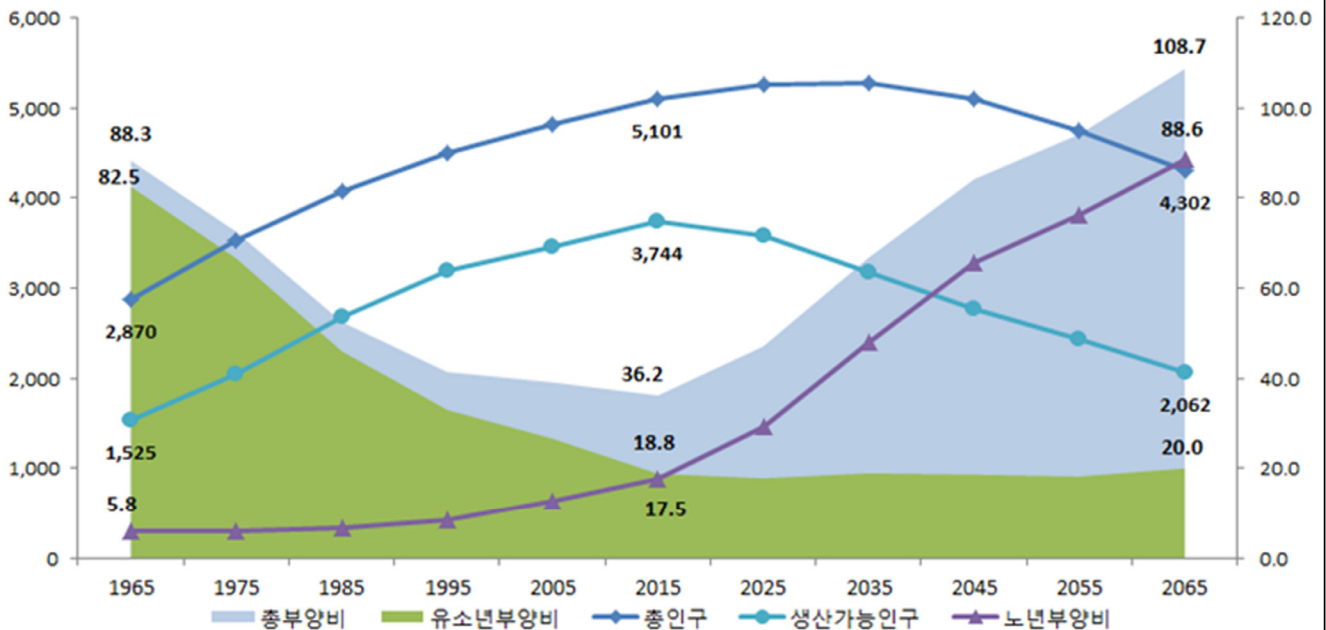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추이와 전망



자료: 신석하 외(2012, KDI)

<그림> 인구변동 추이

(단위: 만명, 생산가능 인구 1백명당, 유소년 인구 1백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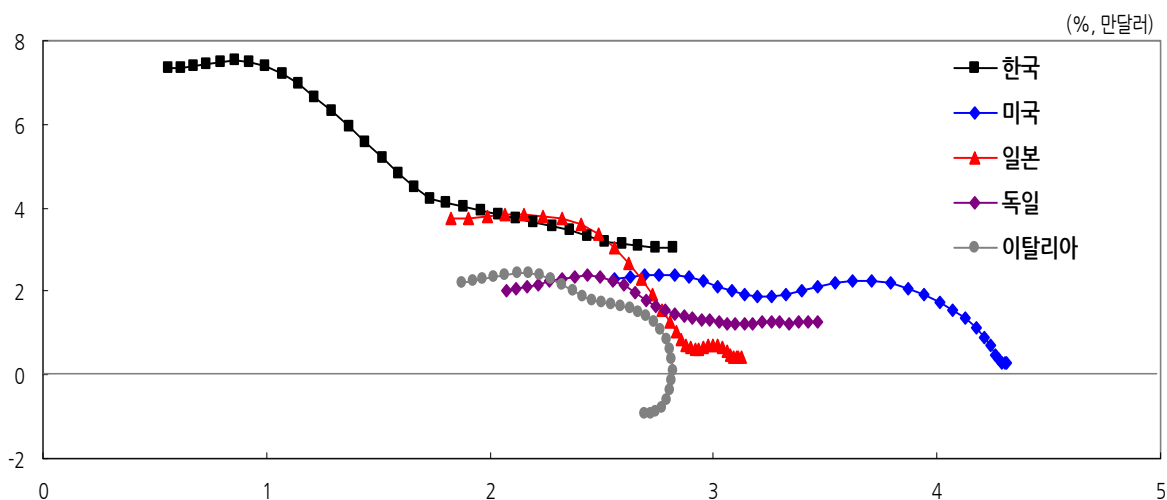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해외 사례의 교훈

- 미국은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일인당 소득 \$30,000를 넘어서도 30여년 동안 2% 내외의 일인당 소득 증가율을 기록
- 독일은 일인당 소득 \$25,000 수준에서 소득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추진한 구조개혁의 성과에 힘입어 하락 추세 저지
- 일본은 일인당 소득 \$25,000 수준까지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였지만, 자산버블 붕괴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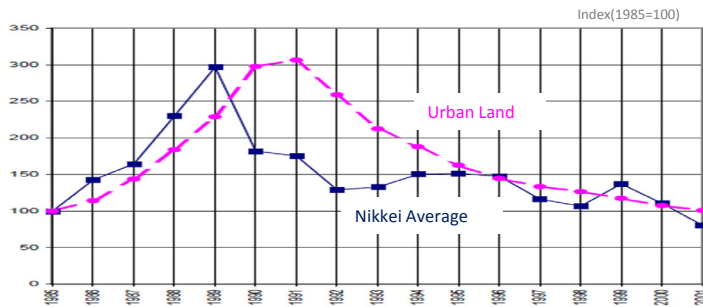
1인당 소득 증가율 추이(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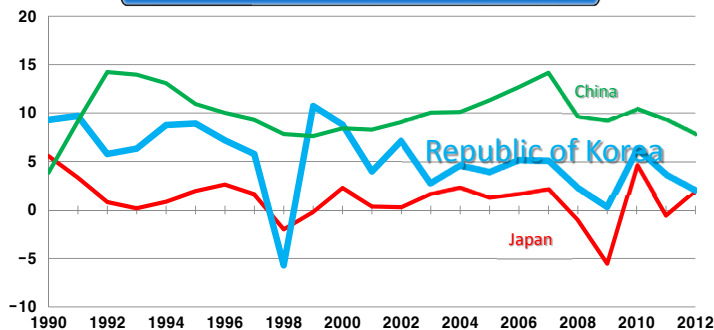
주: 2005년 구매력균등(PPP) 환율 기준, Hodrick-Prescott filter로 일인당 소득증가율 평활화 (smoothing)

반면교사로서의 일본: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자산가격 추이(1985-2001)



한·중·일 경제성장률(1990-2012)



▶ 자산버블 붕괴

플라자 합의 후 저금리 기조 하에 자산 가격 급등, 자산가격 폭락 후 디플레이션과 내수 침체에 대한 대응 미흡

▶ 구조개혁 지연***

잠재부실의 확대, 경제 역동성 저하, 비효율적 재정 지출 증가, 국가 부채 증가

▶ 고이즈미식 구조개혁 추진***

효율 제고가 이뤄졌지만 격차 사회(양극화) 심화로 구조개혁에 대한 반감 형성, 복지 수요 증가

▶ 구조개혁 후퇴***

정권교체 경험 후 민주당뿐 아니라 자민당도 구조개혁에 유보적

▶ 아베노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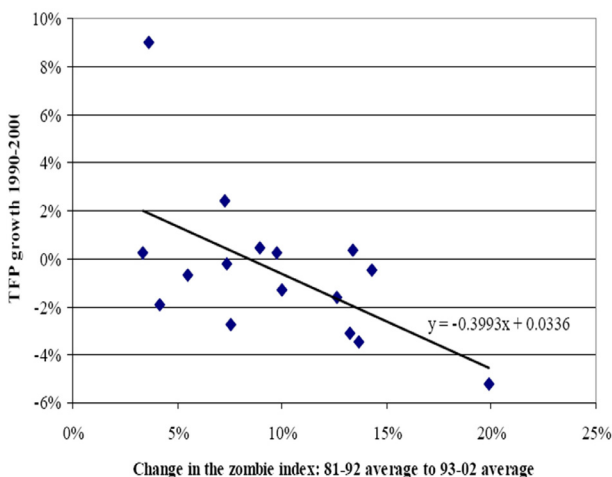
국제역학관계의 변화에 자극 받아 디플레이션 퇴치 및 구조개혁 추진

반면교사로서의 일본: '자원의 정치적 배분'

▶ 경제 역동성 저하와 비효율적 재정 지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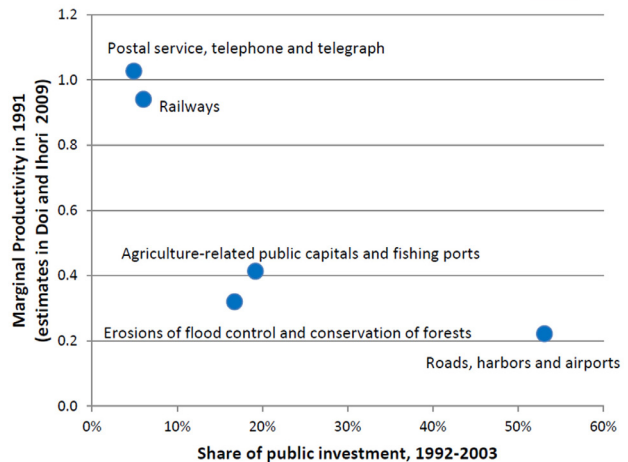
- 좀비기업(우량기업보다도 낮은 금리 적용) 증가율이 높을수록 생산성 증가율 둔화
- 도로·항만·공항 등 이미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한계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투자 집중

업종별 좀비기업 증가율 대 생산성 증가율



자료: Caballero, Hoshi, Kashyap (2009),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ER.

부문별 한계생산성과 공공투자 비중



자료: Hoshi and Kashyap (2011), "Why Did Japan Stop Growing?"

기본 인식: 문재인 정부

□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가 (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요의 위축과 성장활력 둔화, (2) 주력 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의 구조조정, (3) 기술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확대 등 다양한 구조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식

- 특히 불평등의 확대가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
- 주력 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선제적 구조개혁보다는 고용위기 수습에 초점
- 기후변화의 도전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 부족

□ 이에 대응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대기업·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아우르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거래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을 상정

주요 정책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차별화되는 핵심 정책으로서, 가계소득의 증대가 유효수요를 증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뿐 아니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국판 임금주도성장 / 포용적 성장)
- 혁신성장 정책은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재벌의 선도적 멘토 역할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상이
- 공정경제 정책은 기업에 동반성장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입법 조치와 법 집행을 상정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론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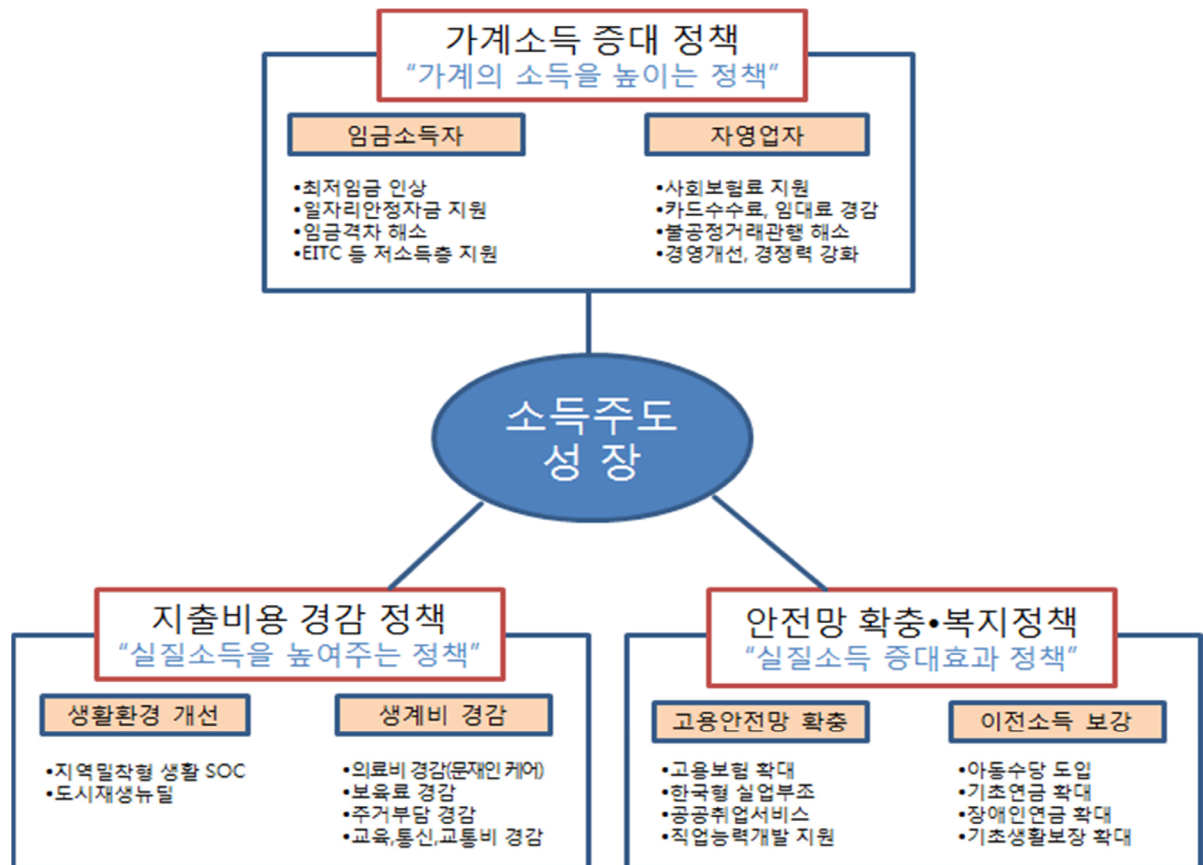
<표> 경제구조와 성장·분배정책의 조합

		성장·분배정책	
		노동친화형	자본친화형
경제 구조	임금주도형	임금주도성장 (전후 황금기: 1945-73)	침체 또는 불안정한 성장 (수출·부채 의존 성장)
	이윤주도형	침체 또는 불안정한 성장 (구조전환 관련 판단 필요)	이윤주도성장 (낙수효과)

자료: Lavoie and Stackhammer(2012) 등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1) 경제구조: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할 때 민간총수요(소비+투자+순수출)가 증가하면 임금주도형, 감소하면 이윤주도형(예: 자원부국, 노동집약적 개도국)
- (2) 성장·분배정책: 장기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노동친화형,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자본친화형(예: 노조 억압, 사회안전망 약화, 임금인상 억제, 부자 감세)

<그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대축



정책의 전개와 평가

- 탄핵사태와 촛불혁명을 거치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이행은 담대하지 못했고 거시 경제 운용에도 난맥상을 보이면서 집권 초기의 좋은 기회를 허비
 - 촛불혁명의 정신을 따르자면 공정경제를 가장 강조하면서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했으나, 제도개혁보다는 상징성 있는 행사와 기업의 자정 노력에 의존
 - 설령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할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은 미진한 가운데 거시경제 운용의 문제로 내수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구조개혁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기업의 투자에 호소하는 상황 전개

정책의 전개와 평가

- 2017~2018년 거시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과 통화·재정정책의 난맥상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은 저조
 - GDP 성장률은 2017년 3.1%, 2018년 2.7%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양호한 편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13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 정도 상승
 - 초기 부동산정책의 문제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기여
 - 2018년 GDP의 1.4%에 해당하는 25.4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등 긴축적인 재정 운용으로 내수부진 심화

정책의 전개와 평가

- 적대적 언론 환경 속에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난항
 -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한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난 쇄도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및 속도조절, 복지재정 확대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책 집행
 - 혁신성장 정책은 2019년 여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인해 부품 소재 국산화와 위험 분산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실적 저조
 - 공정경제 정책은 정부 출범 초기의 좋은 기회를 놓친 후 주요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중

향후 과제

- 담대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정책 간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하는 한편, 경제활력이 유지되도록 거시경제를 운용함으로써 구조개혁을 지원
- 공정한 시장경제 구조 확립에 필요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적극 추진
 -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적극 홍보한 후, 통과가 가능한 부분부터 입법화하고 유권자의 추가적인 지지를 얻어 나머지 부분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 법 개정 없이도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Stewardship Code)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를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난할 수 있으나,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대책 자금 관리에 도움

향후 과제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대축인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복지정책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간 선순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측 요인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개념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구분하다보니, 마치 소득주도장은 혁신과 공정성에 관한 내용은 없고 민생대책에 국한된다는 오해 유발
-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점차 낮춰가면서 국내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정책 추진
 - Henry Ford가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1914년 일당을 \$5로 두 배 이상 올린 사례 참조

향후 과제

- 혁신성장 정책이 성과를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대기업의 선도적 멘토 역할에 의존하는 창조경제 정책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기존 대기업뿐만 아니라 현상을 파괴하는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일본기업을 마치 한국기업인 것처럼 간주하며 국제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전략은 국제관계 리스크가 증가한 상황에서 통용되기 어려우므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모색
 - 세계적인 생산기지에서 거대시장으로 변모한 중국 현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
- 미-중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협의체와 중국 주도의 협의체가 교집합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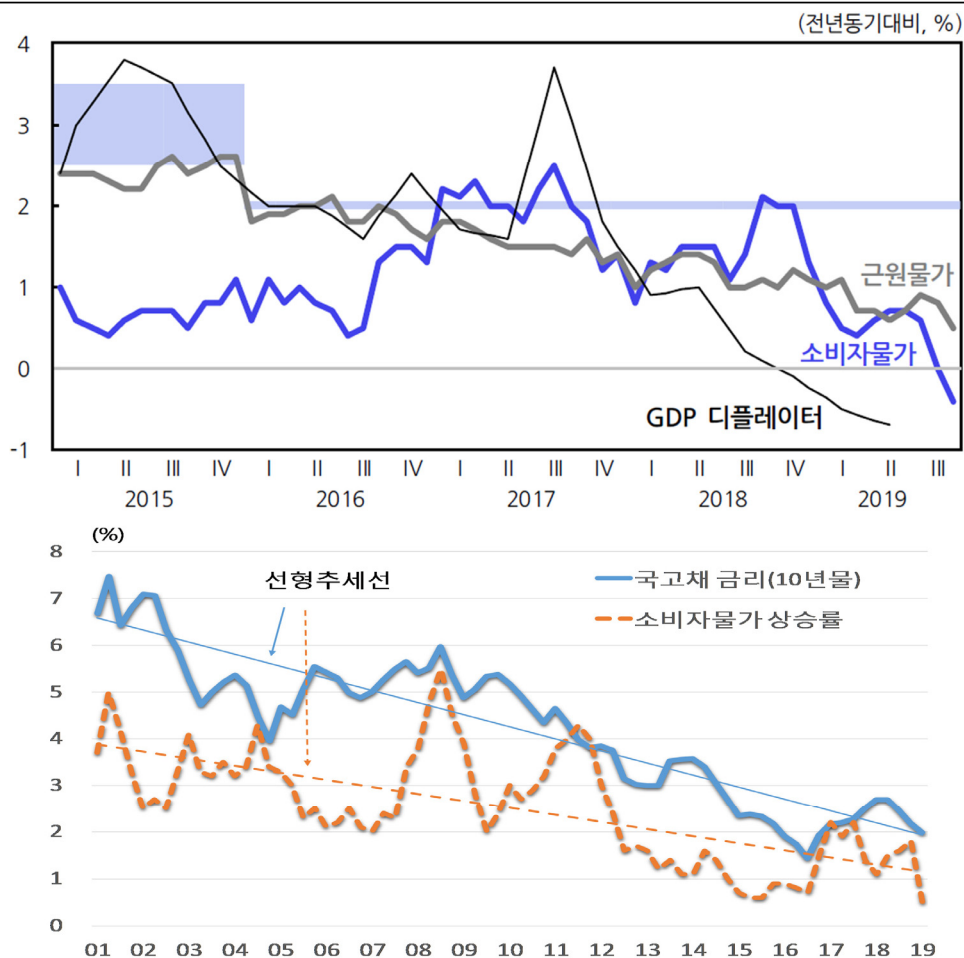
-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 2%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추진
 - 부동산 등 자산가격과 관련된 금융안정은 미시 및 거시안정성 정책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실제로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촉발한 금융불안정의 원인은 저금리정책보다는 도덕적 해이라는 점에 유의

<표> 통화정책목표 적용기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과 실제치
(%, %p)

	2007~09년	2010~12년	2013~15년	2016~18년	2019년 이후
목표 수준(A)	2.5~3.5	2~4	2.5~3.5	2.0	2.0
실제치(B)	3.3	3.1	1.1	1.5	0.4
격차(B-A)	0.3	0.1	-1.9	-0.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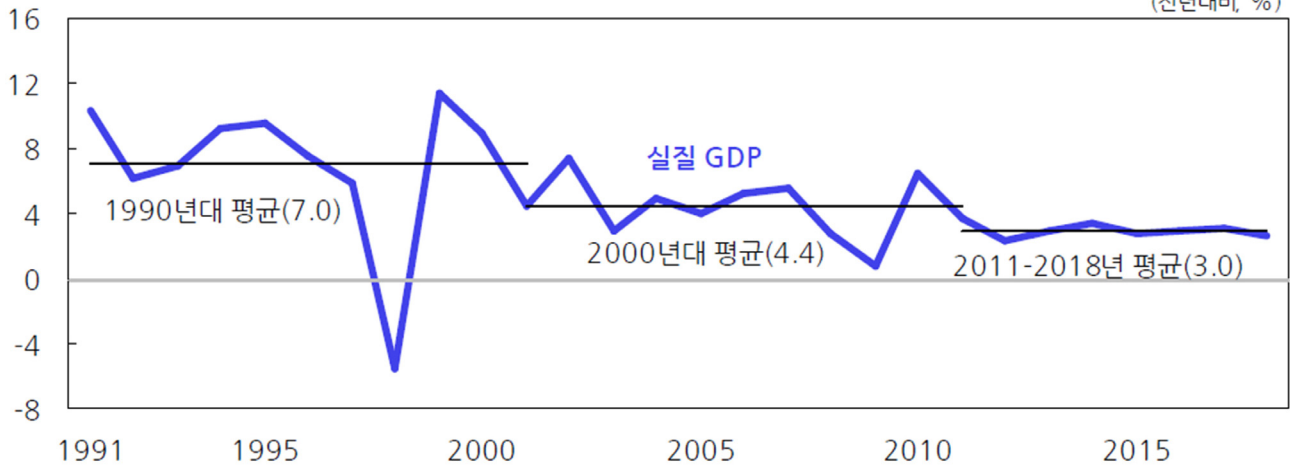
주: 격차는 목표 수준의 중심치를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정규철(2019),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자료: 조동철(2019),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전년대비, %)



(%, %p)

기간	실질 GDP (1+2+3)	취업자 (1)	물적자본 (2)	총요소생산성 (3)
1991~2000	7.0	1.0	3.8	2.0
2001~2010	4.4	0.8	1.9	1.6
2011~2018	3.0	0.8	1.4	0.7

자료: 권규호(2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향후 과제

- 전략적 재정 투자를 통해 내수부진에 대응하면서도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
 -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구조 및 세수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성장기반 확충
 -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 투자(그린뉴딜)
 - 복지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기반 제공, 생활 SOC 건설 등 공공투자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을 적극 활용
 -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낮다는 점(2015년 기준 7.6% 대 18.1%)을 감안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이 개선되도록 현장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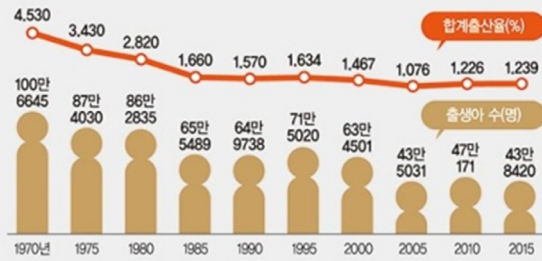
향후 과제

- 보육·교육 등 역량 배양 단계부터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과에 기초한 보상과 규율이 이뤄지도록 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할 필요
 - 포용(‘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 배양
 - 역량 부족과 협상력의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 둔 채 약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강자에 대한 행위 규제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적 요인의 교정을 모색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함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경영자와 노동자의 역량 배양 기회를 제공
 - 지대에 대한 조세를 강화하고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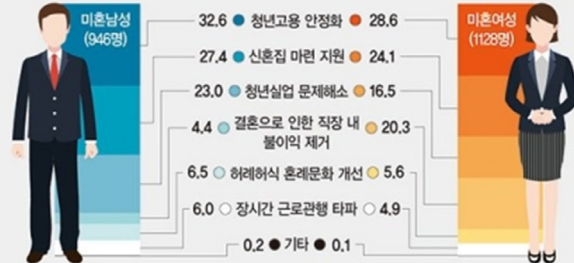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지만, 출산율 하락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출산독려 및 지원정책보다는 취업, 결혼, 출산, 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확충, 근무시간 유연성 제고 등 제반 여건을 조성
 - 관참은 일자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젊은 부부가 장시간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고용 복지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

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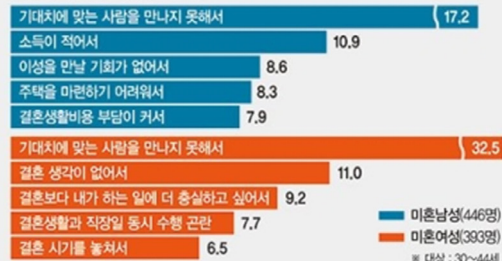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15~49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

미혼남녀에게 가장 필요한 결혼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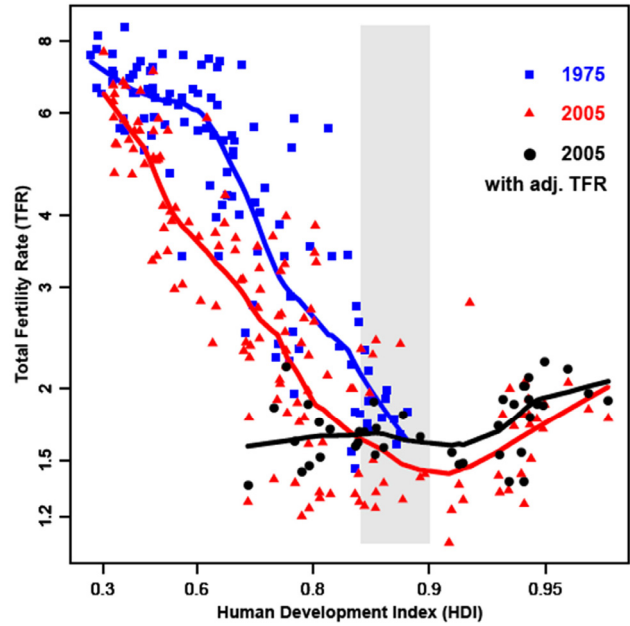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대상: 30~44세

자료: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Source: Myrskla et al. (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Note: TFR didn't rebound in Japan, Austria, Australia, Switzerland, Canada and South Korea.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평가와 과제

11/11/2019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11/11/2019

1. 경제정책 요약 및 평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경제정책 기본방향: 3대 전략 2대 기반

➤ 일자리중심경제+ 소득소득주도성장

- **일자리**: 공공부문 채용 확대 (81만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생계비**: 공적임대주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값 등록금, 100원 택시 확대,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수준 및 기간 확대, 주거교육 급여 인상,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희망사다리 복원

➤ 혁신성장

- **핵심선도사업**: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 **전방위산업 혁신**: 혁신형 중소기업육성, 주력업종 경쟁력 제고 (구조조정 등), 서비스업 농축산업 혁신
- **규제혁신 혁신인프라**: 혁신 모범 자본, 신북방 신남방 정책

➤ 공정경제

- **공정경제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 **공평과세, 공공기관 개편**

➤ 2대 기반

- **거시안정**: 성장유지, 리스크 관리
- **중장기 대응**: **저출산** 등 도전과제 대응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안이한 현실 인식과 잘못된 정책 우선 순위

➤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한국 경제 성적 양호 ➡ 안이한 현실 인식

- 경제성장률이 3년만에 다시 3% 넘어섬
- 2018년에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 잘못된 정책 우선 순위

- 경제성장률의 반등은 **반도체 수퍼사이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고, 2011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문제임을 무시.
- 공정경제 정책을 통해 **원가경쟁력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무시.

➤ 2018년에 최저임금 블랙홀에 빠진 정책.

-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에 대한 통계와 분기별 가계소득 동향조사가 발표되면,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보수층의 정부에 대한 공격
- 경제정책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이른바 '기승전-최저임금'
- 제조업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는 보수층의 집요한 공격에 뚜렷한 대답을 못 내놓았음.

➤ 1년차에 추진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사실상 포기.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경제정책의 보수정권 정책으로 회귀

11/11/2019

- 2019년부터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제고”라는 슬로건으로 사실상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
-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거시 및 산업 정책.
 - 예타 면제를 통한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경기부양과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대통령 등이 재벌 총수와 만남과 규제 완화 약속으로 재벌의 투자 제고 요청
 - 정부주도 4차 산업혁명: 불확실성이 특징인 혁신형 경제에서 정부의 육성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움.
 - 서비스 산업 육성: 제조업의 높은 비중과 금융산업의 낙후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을 대체하는 성장 동력이 되기는 어려움.
-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를 산업은행과 독점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형이 되기 어려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대응.
-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대는 지속가능성에 의문.
 - 포괄수가제 도입 없는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의 한계.
 - 한국형 실업부조 확대는 긍정적이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업연금 등과 관계 설정.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산업은행과 독점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정책: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관련 문제점

11/11/2019

- 대우조선 인수합병 이후에 대규모 사업 재편 가능성.
 - 양사는 컨테이너선에 기반을 두고 LNG 등 특수선박을 만드는 회사.
 - 합병 이후 겹치는 일부 도크를 정리하고 컨테이너선 제조 공정을 합칠 가능성.
 - 사업재편은 인력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음.
- 선가 상승이 중국 경쟁사의 진입을 촉진할 개연성.
 - 인수합병으로 선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중국 경쟁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선가 상승의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고, 오히려 중국 회사들의 추격을 앞당길 수 있음.
-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요독점화
 -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요독점화로 인해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가 심화될 수 있음.
 - 이는 기자재 산업의 고도화에 장애요인이 됨.
- 기업결합 심사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
 - LNG선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광주형 일자리의 한계

➤ 광주시-현대차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 체결 (2019.1.31.)

-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 공공기관 등이 재무투자자로 참여.
- 현대차는 1천CC 미만의 경형 SUV 차종을 개발,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지원과 판매를 담당.
- 빛그린산단 내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상을 목표.
- 노동자의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원 수준.
- 정부와 시가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 소득 지원.
-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은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시까지 유지.

➤ 광주형 일자리의 한계와 문제점.

- **경영과 지분의 불일치 및 사실상 공기업.**
- 노동조건에 대한 노사상생협의의 결정의 **법적 구속력 부재.**
- 가격경쟁력 상실과 스마트자동차로의 혁신이라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모형.**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평가

➤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로 인한 **정책 우선 순위** 설정에서의 오류.

- **재벌의 경제력집중의 심화로 제조업 진화의 단절과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 심화되고, 이는 **조기퇴직·자영업·노인빈곤·청년·저출산 문제**의 악화로 이어짐.
- 원가경쟁력 위주의 제조업이 기술경쟁력 위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이 것이 공정경제의 실현이기도 함.
- **재벌개혁은 공정경제의 핵심적인 조건임.**
- 공정경제라는 구조 없이는 혁신성장도 소득주도성장도 작동되지 않음.
- **경제활력 저하와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정책이 필요조건이며, 공정경제 없이는 공정사회도 구현될 수 없음.

➤ 재벌개혁 등 종합적인 개혁과 단기 정책의 조합에 대한 필요성 간과

- 재벌개혁과 함께 노동·재정·복지 개혁을 시행함으로써 **경제 구조와 규칙을 재정립**해야 함.
- 산업구조조정과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함.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 실행

-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입법을 통한 개혁을 주창.
- 2018년 7월에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모범규준 시범운영 실시 그러나 **금융그룹감독법** 법제화는 지연. (의원 입법으로 2건 발의).
 - 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
 - 금융계열사 간 출자 분을 적격자본에서, 모기업 차입금은 필요자본에서 차감.
 -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평가 및 관리.
 - 이학영 의원 안은 금융그룹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사실상 지배 포함)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금융계열사 임원의 경우 비금융계열사의 임원을 겸직 금지 포함.
- **상법 개정안** 국회 계류.
 -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포함.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계류.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을’에 대한 보호 제도 강화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문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

- **공약 자체도 실효성 에 의문이었으나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 상 재벌개혁은 포기한 상태.**
-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개혁은 방기함.**
 - 상법개정안보다 더 효과적인 **비지배주주 다수결 (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거래소 상장규칙에 도입**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철저히 적용**함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유도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경유착 의혹이 있음.
 - **보험업법 감독규제의 개정**으로 금융통합감독법 입법을 유도해야 함.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요독점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가능.
-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친재벌 정책을 오히려 추진**하고 있는 실정.
 - 은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 최근에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참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

-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
 -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지** 및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을 악용한 지배력 강화 차단.
 -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
-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2. 한국 경제의 현실 : 제조업 위기의 현재화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1. 중국 경제의 성장과 산업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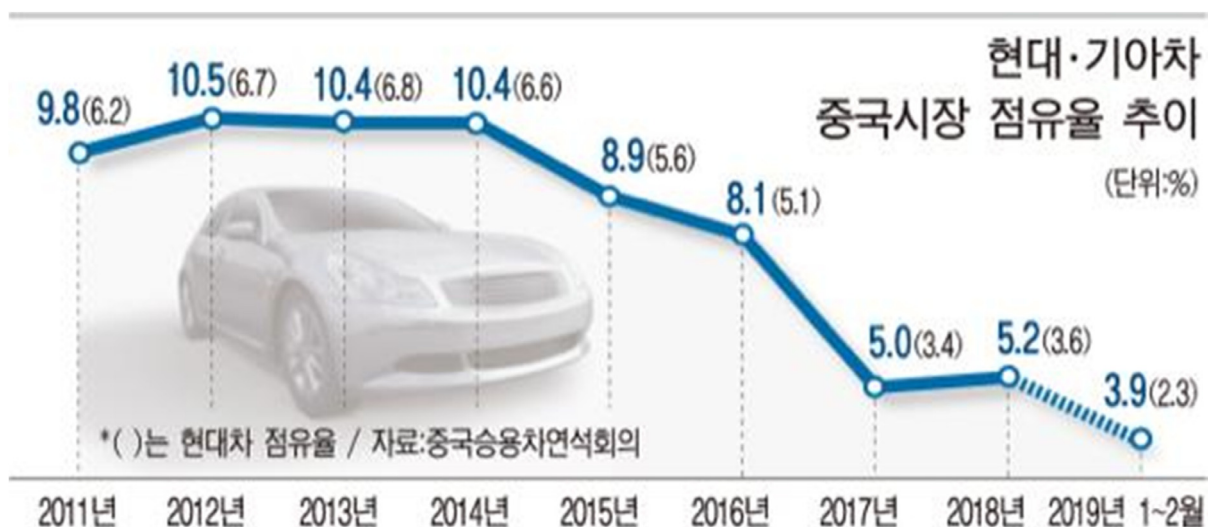
- 중국 등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을 대체하기 시작
 - 1990년대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과 유사.
 - 강두용 외 (산업연구원, 2016)에 따르면, 제조업의 **세계 최고 대비 상대기술 수준이 고위기술 업종은 2007년부터, 중고위 기술업종은 2011년 이후 하락, 고위 및 중고위 기술 업종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
 -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22일 2019년 1분기에 전 세계에서 팔린 5178만대의 TV 중 TCL·하이센스 등 **중국 TV 업체의 제품이 33.5%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 TV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31.7%로 중국에 1.8% 포인트 뒤처졌음.
- 대한상공회의소가 2016년 5월 27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전국 제조업체 2,4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의 절반가량(49.9%)이 지금의 수익원은 사양화 단계**라고 응답
 - 제품의 범용화 기간도 평균 8.4년이라고 답했는데, 전자업종이 6.5년으로 가장 짧았고, 자동차 8년, 기계와 철강은 9년, 정유는 10년%에 불과.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중국 자동차의 성장과 현대차 수요 잠식

- 현대자동차의 국내 사업 부문이 2018년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 전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적자의 늪'에 빠진 부품사도 속출. 한국경제신문이 상장 부품사 82곳의 올 상반기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곳(30.5%)이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 52곳(63.4%)은 작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어** 성장엔진마저 꺼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 업계 관계자는 "폐업 위기에 내몰린 2·3차 협력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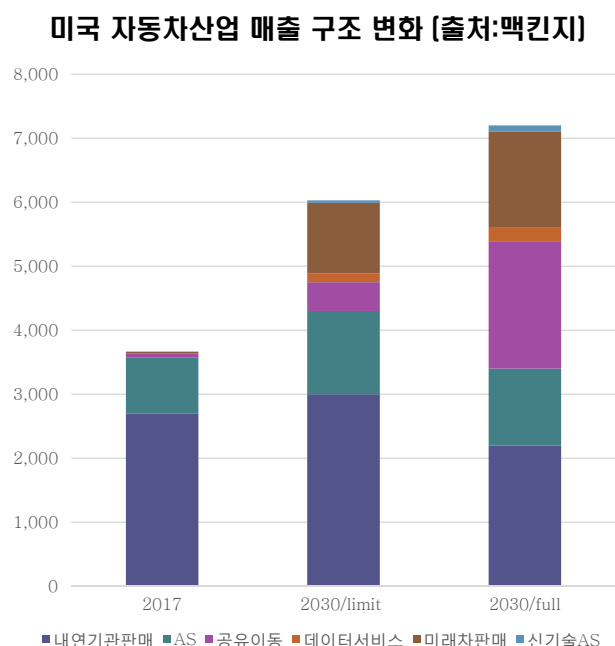
현대차는 **2018년 3분기에 매출 24조4337억원, 영업이익 2889억원을 거뒀다고 25일 발표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6.0%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은 1.2%로 3.8%포인트 떨어짐.**

현대자동차가 3분기 영업이익 75% 급감을 발표한 다음 날인 26일 A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최근 **자동차 협력사 연체율이 1.6%로 중소기업 전체 대출(1.1%)의 약 1.3배까지** 올라갔다..."



2. Digital Transformation: 4차 산업혁명, 산업4.0

-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발달,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 고도화, 빅데이터 축적 및 AI 발달 등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 중.
- 자동차 산업의 예시.
 -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 개인 운전에서 자율주행으로.
 - 개인 소유에서 차량 공유로.
-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은 비용/가격에 근거한 중저가 차종에 집중.



3.2011년 이후 제조업 위기의 현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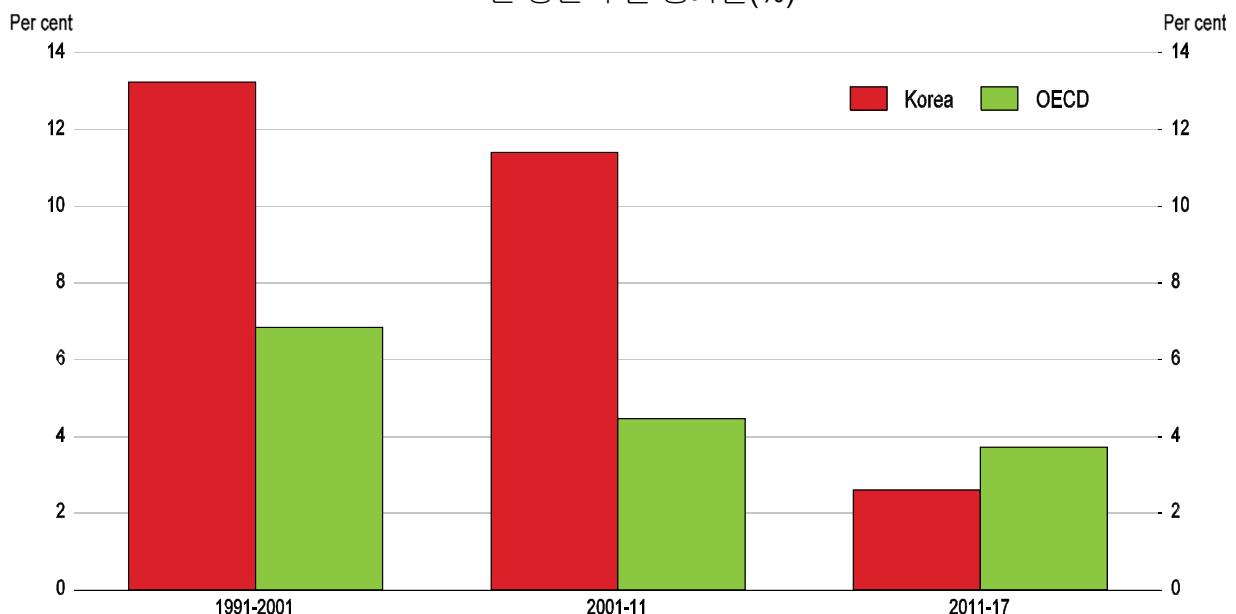
-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음** (GDP의 29.3%, 2016년)
-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2011년 이후 **하락이 두드러짐**.
 - 제조업 **성장률**은 2010년 들어서 경제성장률과 유사해짐.
 - 2011년 이후 제조업 **매출액증가율과 수익성**도 하락 추세.
 - 2012년도 이후 **무역특화지수**는 소폭 하락, 비IT산업에서 하락이 뚜렷함.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조선, 스마트폰 등 **주력산업의 위기** (현대경제연구소,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2018.4.8.)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2019년부터는 하락 국면 (ZDNet Korea, “삼성이 SK·LG도 1분기 ‘반·디’ 어닝 쇼크 예상”, 2109.4.12).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수출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

연 평균 수출 증가율(%)



출처: OECD 경기 전망: 통계와 추정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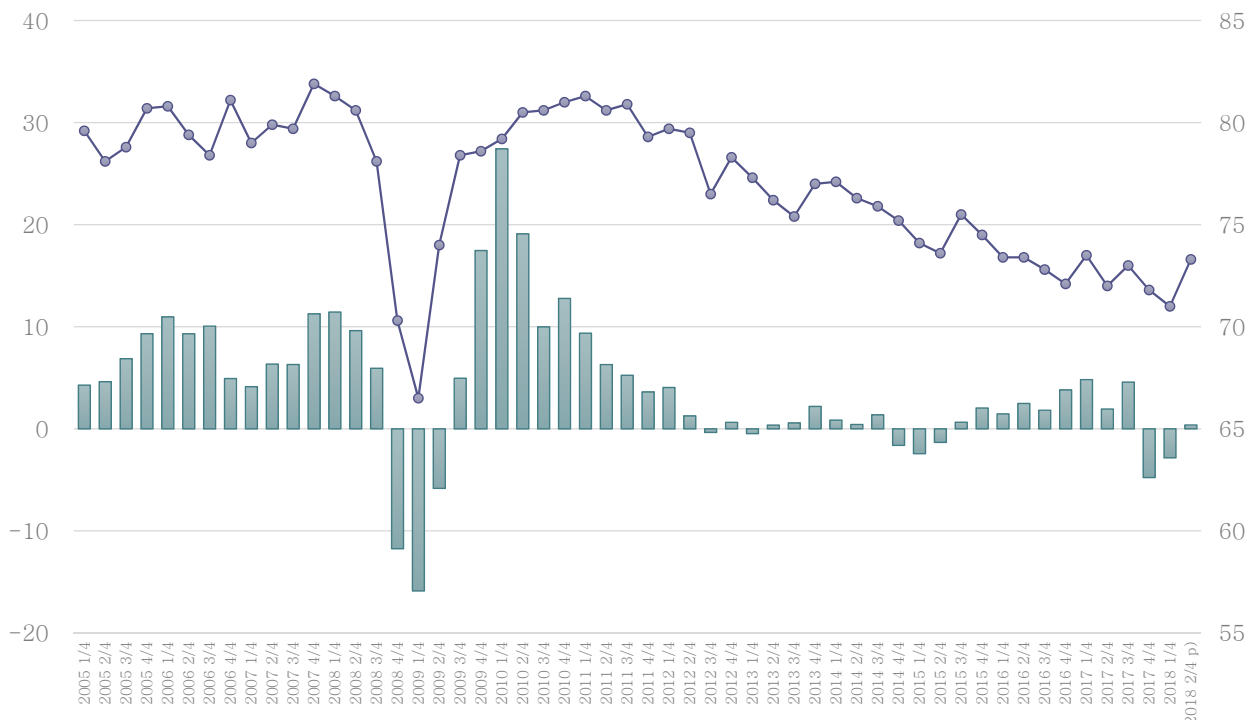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 , 전년동기비)

국내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평균가동률 추이

(%)



■ 제조업 생산(좌) ● 제조업 평균가동률(우)

자료출처: 통계청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제조업 진화의 단절과 넷 크래커 현상

▶ 한국 제조업 위기의 본질은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

- 일본,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으로 산업이 진화해 가고, **범용재 사업은 축소하거나 국외 이전**을 추진 (Herrigel, 2010)
- 한국 제조업은 장치산업 중심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중간재나 특수재 산업으로의 진화가 단절.

▶ **반도체 산업도 예외가 아님** (중앙일보, 2018.10.15).

- 반도체 업계 상장사 166곳의 2018년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률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평균 39.1%였으나, 반도체 장비업체는 13.5%에 그침.
-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협력업체를 빼면 흑자 보는 곳은 거의 없으며, 지난해 82개 반도체 장비업체 중 13곳이 적자.
-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1%**에 불과하며, **소재 업체도 9.9%** 수준, **반도체 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은 18.2%**에 불과.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좀비기업의 양산과 제조업 위기의 확산

▶ **좀비기업의 양산**과 은행 채산성 악화 및 산업 구조조정 문제 대두

- 2018년도 상장기업 7곳 중 1곳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한 한계기업. (한경연)
- 2018년도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를 낸 (CEO Score)
- 기업구조정의 지연과 관치금융: 2015년 6월 기준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액은 118조 6천억원, 이 중 특수은행이 61.7%를 차지.
- 지방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파산·회생 신청 증가 속도가 2019년부터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 연초 상승 추이를 감안할 때 연간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준(법인파산 807건, 기업회생 980건)을 넘어 올해 각각 1,000건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서울경제, [단독] 제조업 침체… 지방법원 파산부 '문전성시', 2019)

▶ 투자 감소의 본격화

- 한국은 2017년 하반기부터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꾸준히 증가. 2018년 3분기 현재 한국의 (총고정)투자는 전년동기비 6.6% 감소(2008년 4분기(-7.0%) 이후 최대 낙폭)한 반면, 미국은 연 5%대 증가율을 기록. (KIET 산업경제, 2018.11)
- 일본과 독일에서는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다소 감소한 모습이나, 연간 약 2%를 웃도는 수준에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 (KIET 산업경제, 2018.11)
-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19년 'KDI 경제동향' 3월호를 통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감소 폭이 확대한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도 투자의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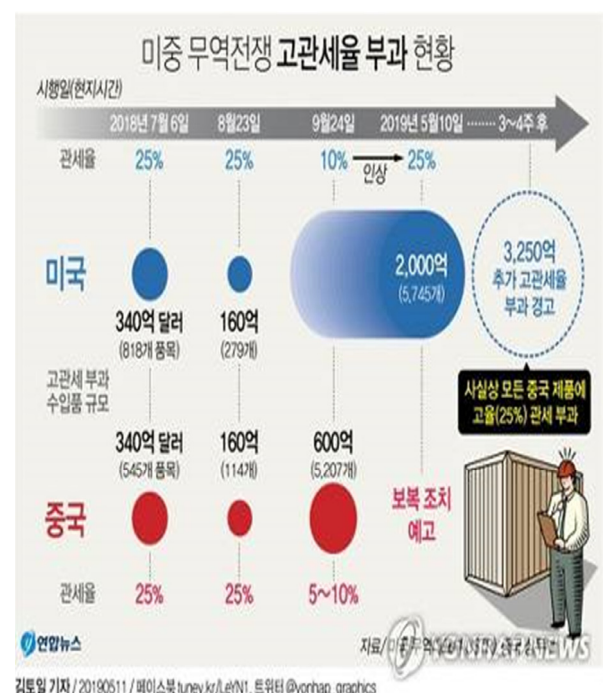
4. 설상가상: 트럼프-아베 리스크

▶ 미중 무역 분쟁

-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제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지난 10일 인상한 데 이어 중국의 나머지 대미 수출품인 3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도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 전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사태가 불거지면 특히 한국과 일본 경제가 연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진단 (IHS 마킷).
-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24%**이며 중국에 대한 전체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80%**에 육박.
- 중국제품과 대미수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혜택.

➤ 이란 제재와 유가 불안정.

▶ 일본의 수출 규제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3.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정부주도 발전전략의 한계

- 모방과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정부주도의 추격형 발전전략은 한계에 봉착함.**
- **혁신형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부주도 정책은 양립할 수 없음.**
 - 기술진보의 불확실성과 경제적·사회적 제약을 모두 고려하여 미래 사회에서 상용화 될 기술을 정부가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예: 영화 **Back to the Future II**에서 예상한 flying car, Mr. Fusion, hoverboard, 자동으로 신발끈을 매는 신발, 주유소에서 일하는 로봇, 우편 팩스 등은 상용화되지 않았음.
- 그러나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발굴·육성과 금융지원이라는 개도기식 정책에 머물고 있음.**
 - 정부 예산으로 지원금을 배정하게 되면 결국 성공한 기술을 추종하는 지원만 하게 되고, 새로운 융합형 기술은 배제됨.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재벌체제의 한계: 사라진 혁신의 기회

-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 전속거래는 재벌단위의 경제 블록화를 발생.**
- 산업연구원 보고서(2016.4.15.)에 따르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전속거래가 관행처럼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
 - 특히 하청의 1차 벤더는 주로 계열사, 친인척, 가신의 자식들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 **경제의 블록화는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 196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과도한 수직계열화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이뤄지지 않았음 (Rajan and Zingales, 2003)
 - 1980년대 통신장비 생산업체 Western Electric이 AT&T의 분할로 독립회사가 된 이후 정보통신 장비 산업에서 발생한 기술혁신의 예 (Olley and Pakes, 1996)
 - 일감몰아주기는 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악영향도 끼치고 있음, 독립적 기업들로 구성된 **인터넷 게임 산업**과 재벌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 예인 **SI산업**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음 (Park et. al., 2014)
- **재벌 세습은 owner risk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기업의 시장 진입과 벤처캐피탈의 성장을 더 어렵게 함.**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재벌체제의 한계: 사라진 혁신의 유인

-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되어 기술탈취가 만연하며, 사실상의 전속계약으로 중간재 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이 제거됨.**
 - 삼성전자의 태정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뉴스타파가 2016.5.26)
 - 현대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의 국민청원 (연합뉴스, 2017.12.5)
- **단가 후려치기**는 최종재를 생산하는 재벌 대기업에게는 최종재의 가격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게 함.
 -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의 여력이 없어짐. (2012년 기준으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회사들 중에 국내기업은 현대차 계열사와 친인척 회사 5곳에 불과)
 - 나아가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저임금으로 이어져 **양극화의 원인** 되고 있음.
- **중간재 산업뿐만 아니라 최종재를 생산하는 재벌 대기업도 혁신 유인 감소.**
 - 현대차와 기아차의 2016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각각 2.5%, 3.1%로 1위 폴크스바겐(6.3%)과 비교해 절반도 안됨 (CEO Score).
- **이에 반해 B2C 분야에서는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 게임사업자, 아모레퍼시픽, bio 등등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현대차와 하청업체 수익성 추이 (자료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11/11/2019

구 분	2014	2013	2012	2011
현대자동차	8.5%	9.5%	10.0%	10.4%
현대모비스	8.5%	8.6%	9.4%	10.0%
1차대기업	5.8%	6.3%	6.8%	5.6%
1차중기업	3.8%	4.3%	4.0%	4.3%
1차중기업(비전속)	5.4%	6.1%	6.1%	6.6%
2차 벤더	2.8%	3.2%	2.0%	1.8%

- **재벌대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과 중소기업과의 격차 심화로, 청년실업, 이른 퇴직, 자영업 몰락, 노인 빈곤의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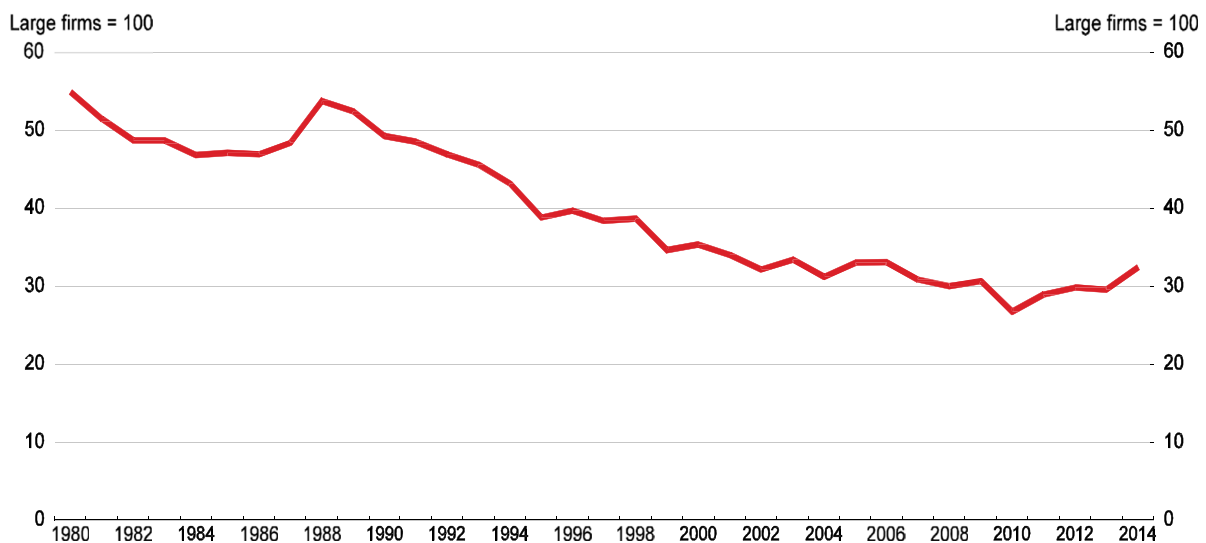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의 증가

11/11/2019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근로자 당 부가가치



출처: 통계청,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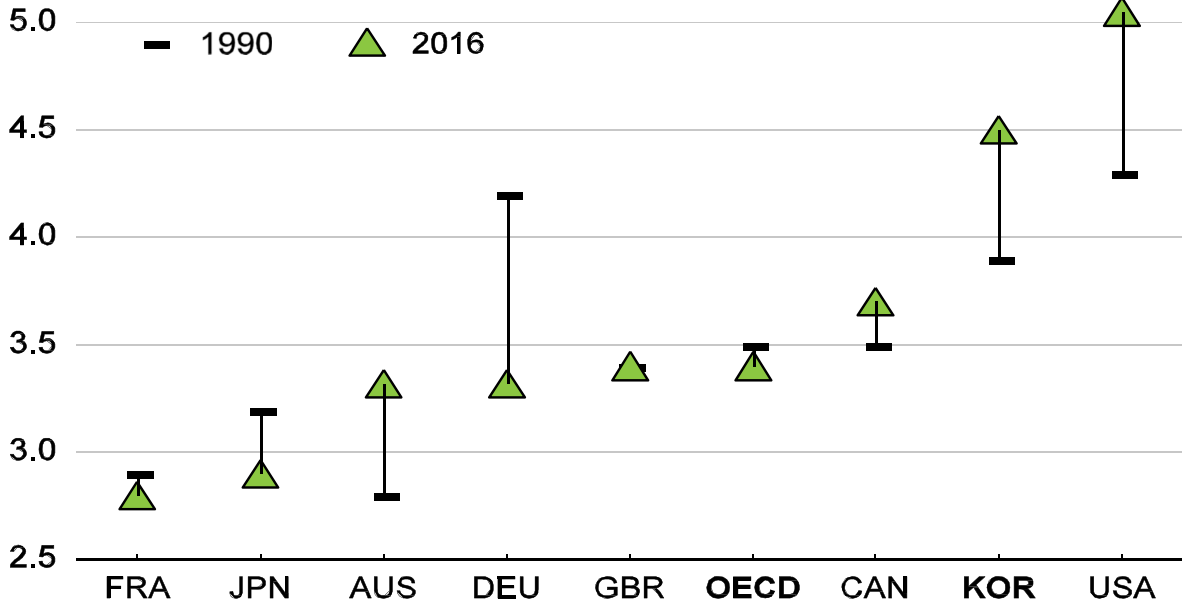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임금 불평등은 높고 증가함

11/11/2019

Ratio

10 분위 대비 90 분위 비율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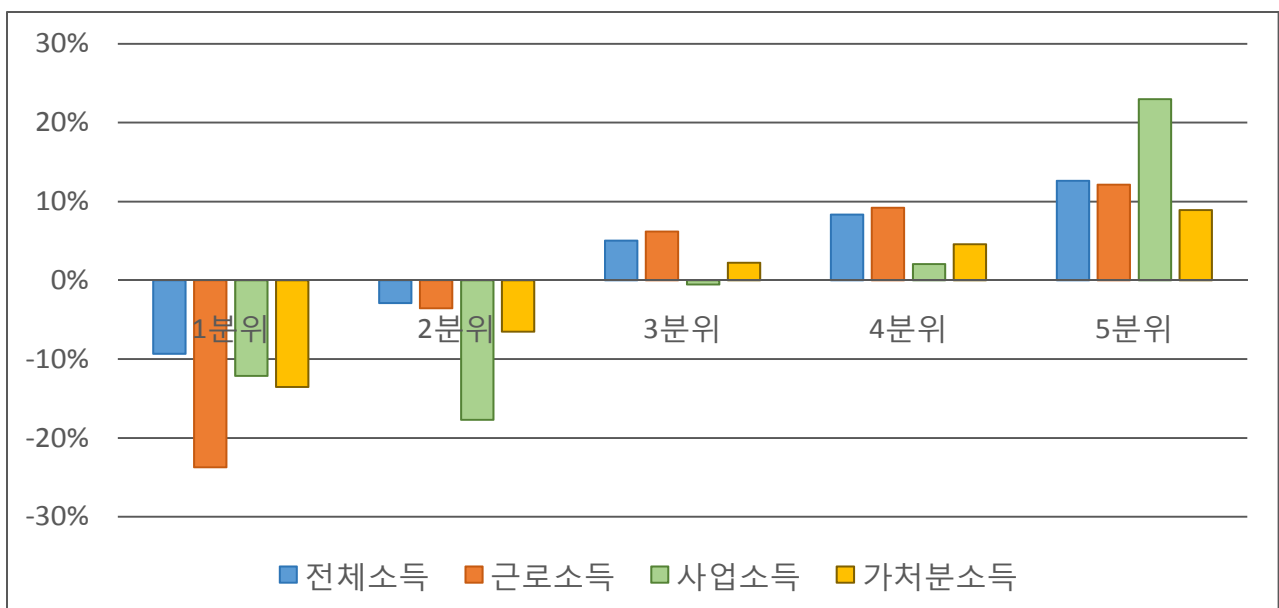
출처: OECD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

5분위 가구의 소득 변화율

11/11/2019

(2016년 4/4분기~2018년 4/4분기, 명목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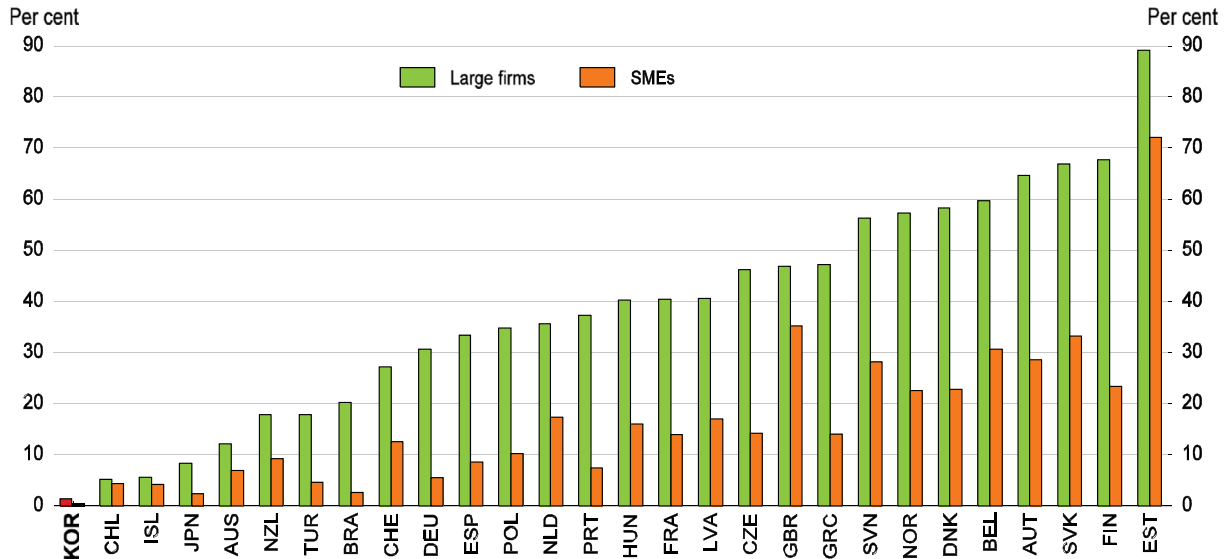
출처: 김낙년 (2019),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이와 국제비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단절

기업 규모별로 혁신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한 기업들, 2012 ~ 14'



1. 제품 또는 프로세스 혁신에 종사하는 기업의 비율. 한국의 경우 2013-15 년 자료.
출처: OECD (2017), OECD 과학, 기술과 산업 스코어보드 2017.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로 전환이 필요

- 경제구조 개혁의 핵심: 재벌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재벌중심의 경제블록화 해소:** 공정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
 - **징벌배상(punitive damage)과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를 통해 혁신의 유인 제공.
 - **수요독점 규제:** 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통한 혁신 여력 제공.
- 재벌대기업과 **물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꿈
-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70~80%로 상승,
 - 제조업부문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양극화 해소와 경제적 생애주기 복구

- 고용 없는 성장과 대·중소기업과의 격차 심화로 인한 청년 실업, 이른 퇴직, 자영업 몰락, 노인 빈곤의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
- 이에 더해, 자영업 문제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연금의 정상화,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실질적 정년연장 (근속기간 연장)이 필요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개혁, 재정개혁, 복지개혁이 필요함.
- 이런 개혁은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조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국민 다수가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임.
- 연금 생활자가 많아지면 자영업에 대한 잠재적 진입은 줄어들고 자영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자영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노사 상생모델과 새로운 산업정책도 함께 추진

-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과 고용 변화가 불가피 함.
- **노사 합의로 산업별 상생모델**을 만들어 사업재편과 고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도 필요.
- 노사정이 공동으로 **재교육과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노키아의 브리짓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 고려.
-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
- **부품소재**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사업 재편을 적극적 지원
- 정부연구기관의 **특수재**에 대한 연구개발과 민간에 기술이전
- 정부는 **해외 벤처나 구매처와의 연계**하는 역할 수행
- **실업부조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중앙정부는 재정금융 지원, 지자체가 지역 특성 사업 발굴)
- 스마트 자동차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설계와 재개발** 추진.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현대차의 친 환경 차 생산변화 추이

(총 생산 능력 1,700,000대 유지)

내연차	생산량	1,489,000대	1,260,000대	970,000대	300,000대
	%	87.59	74.12	57.06	17.65
전기차	모델수	4차종	8차종	12차종	18차종
	생산량	200,000대	400,000대	600,000대	900,000대
	%	11.76	23.53	35.29	52.94
수소차	생산량	11,000대	40,000대	130,000대	500,000대
	%	0.65	2.35	7.65%	29.41
연 도		2020년	2022년	2025년	2030년

자료 : 현대차노조 대의원대회 보고자료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현대차 고용 변화 전망

구 분	세부내용	고용감소 규모
대체소재 (경합금, 탄소강화섬유 등)	코나 웬다 적용 이퀴녹스 82% 적용	프레스 70%이상 감소
		차체 70% 이상 감소
		도장 70% 이상 감소
대체 동력원	엔진 변속기	소재, 단조업무 100% 감소
		엔진사업부 100% 감소
		변속기사업부 100% 감소
부품 수 감소	내연차 3만개 전기차 1만 3천개	의장 조립공수 60% 감소
		생관 물류업무 60% 감소
3D 프린팅 기술	개성 강조, 특수차량 수요	1 ~ 3% 수요 잠식
공유경제 확대	렌트카, 택시회사 중심 성장	시장규모 10% 이상 감소

자료 : 현대차노조 대의원대회 보고자료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전기차로 전환될 시 사라지는 부품(일)

구분	가솔린차 부품(A)	필요없는 부품(B)	사라지는 부품(A/B)
엔진부품	6,900	6,900	100%
구동,전달부품	5,700	2,100	37%
차체부품	4,500	0	0%
현가 및 제동부품	4,500	0	0%
전장품	3,000	2,100	70%
기타	5,400	0	0%
합계	30,000	11,000	37%

* 단위: 개

출처: 일본 자동차부품공업협회/ 박선후(2018).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대응방안.” IBK 경제연구소 (2018.2)에서 재인용.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국내 부정적 영역 부품군 기업수 추정

구분	전체 기업수	감소 비중	해당 기업수
엔진부품	1,920	100%	1,920
구동,전달부품	1,395	37%	516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643	70%	450
자동차부품 제조업 전체	10,211	28%	2,886

주1) 일본 자동차부품공업협회의 감소 비중 적용

주2) 자동차부품업체수는 통계청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출처: 박선후(2018).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대응방안.” IBK 경제연구소(2018.2).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부록: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11/11/2019

경제력 집중

- 20세기 초 미국에서 “**Progressive movement**”는 경제력 집중이 **게이트 기퍼 (즉, 경제권력)**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정의. (Becht and DeLong, 2005).
- **Existence of economic power**(경제력 집중): a situation in which someone's economic future depended on their pleasing on particular gatekeeper.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개혁 세력이 연대해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다원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잡는 문제임.**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재벌문제

- 재벌은 **총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함.
- 국가차원: 다원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형해화
- 경제차원: 시스템 리스크
- 기업차원: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의 무력화
 - 황제경영, 사익편취: 소액주주 이익 침해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M&A, 보수)
- 시장차원: 진입·퇴출 장벽, 사업기회 박탈, 혁신 장애, **경쟁력 저하**
 - 재화시장, 하도급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

주요 이슈	주요 내용
소유지배구조	상장회사 2층 구조의 피라미드 기업집단만 허용. 기존 기업집단은 6년 안에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함. 새로운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
금산분리	주요 금융기관과 주요 비금융회사의 동시 보유 금지. (주요 금융기관은 자산이 400억 세겔을 초과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 주요 비금융회사는 매출 또는 부채가 60억 세겔 이상이거나 독점사업자로서 매출 또는 부채가 20억 세겔 이상인 비금융회사)
국공유 자산 할당 조건	집중화된 기관(concentrated entities)의 민영화, 주요 공공입찰, 라이선스 획득 등에 참여 허용 여부를 권고하는 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Reduction of Economic-wide Concentration) 설립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경제력집중법의 보완적 입법: 기업 거버넌스 개혁

-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업지배구조를 권고
 - 모든 이해당사자거래(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arties)는 “**Adopt or Disclose**” type의 의무를 짐.
 - 지배주주와 **친인척의 임원 선출과 보수**는 주총에서 **Majority of Minority (MoM)** 규칙으로 결정.
 - 주총이나 debenture 보유자 회의에 인터넷으로 전자투표 도입
- 총수(controlling shareholder)가 **33% 미만의 의결권**을 가진 wedge company에 대해,
 - 사외이사가 1/3 이사회의 이상이고, 사외이사는 주총에서 **MoM** 규칙로 선임
- 집단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의 비용을 ISA(Israel Security Authority)가 지원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 **MUST participate, vote & report, proxy advisory services**
- IAA(Israel Antitrust Authority)에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liefs) 권한 부여
-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각 LTS(Long-term Savings)펀드는 개별 기업집단과 상위5개 기업집단에 투자 비율 제한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지배주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위한 제언

- **MoM (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
 - MoM 규칙은 주총에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을 의미.
 - 총수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총수와 이들의 **보수**, **계열사 간의 M&A**,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MoM 규칙을 적용.
 - 공정거래법 11조에 신설항(11조의 5)을 삽입하거나 (박용진 의원 법안),거래소 상장 규칙에 반영할 수 있음.
 - 인도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상장 규칙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총수 일가로서 임원의 보수에 대해 상법에서 MoM 규칙을 두고 있음.
-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금지.**
 - 의결권을 매년 10%, 5% 씩 제한을 강화하면서 3년 안에 금지.
-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에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고, 회사가 분할이나 분할 합병할 경우에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 필요.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제언

➤ 기업집단 출자규제: 계열사(출자계열사)에게서 출자 받은 계열사(피출자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출자를 2층 구조로 제한)하되 100% 출자는 적용 제외.

- 지주회사규제,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둘 필요도 없고, 규제 회피도 불가능.
- 출자계열사에게는 부채 비율 규제.
- 출자규제는 5대(또는 10대) 재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보다 엄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
- 3층 구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에, 손자회사(피출자회사의 피출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이사의 1/2 이상을 MoM 규칙으로 선출.

➤ 구조적 금산분리 (+ 금융그룹 통합감독)

- 주요 금융회사(그룹)와 주요 실물회사(그룹)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
- 그 외의 복합금융그룹에게는 통합감독 체계 적용
- 주요 회사(그룹)에 대한 정의는 이스라엘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



이런 시뮬레이션을 정부가 해야 할 일임. (박상인, 한국경제포럼 2017 참고)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제언

➤ 대리점,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문제

-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 금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2018.1.16)
-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 금지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2018.3.27)
-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구성권 부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체협약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유통업, 하도급 문제

- 대규모 유통업자의 착취와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단가후려치기를 공정거래법 상의 수요독점 규제를 적용할 필요.
- 수요독점에 의한 가격착취에 의한 부당성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비용 등 지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감사합니다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